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 추정

● 2007. 04. 02 역사적 한·미 FTA가 타결되고 양국이 6월30일 이내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FTA 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의회가 기간을 정하여 협상권을 정부에 줬다. 그 기간이 이번 6월30일이다. 이번 타결 결과에 대해 미국 의회가 불만을 표시하고 신통상정책에 따라 노동·환경·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구해와 현재 진행중이며 6월 30일까지 종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추가 협상과 서명을 미국의 법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 아무튼 금번 협상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농업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고 자동차·섬유 등 제조업시장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FTA 타결 결과 제조업에서는 약 5조 5천억원을 15년간 매년 생산액이 증가하는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연평균 6,700억원 정도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농업의 산업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선진국 치고 농업시장을 내어준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 캐나다, EU회원국들의 농업은 타산

업 못지않게 발전되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넛은 선진국이 되려면 이론적으로 농업·농촌이 타산업과 같이 발전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선진국을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일 FTA협상에서 우리는 일본 농업시장 90%를 개방하도록 요청했는데 일본은 50~60% 이상 개방할 수 없다고 하여 한·일 FTA협상은 좌절되었다. 만약 앞으로 한·미 FTA타결 이후 농업분야가 살아남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선진국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차기 정권은 한·미 FTA타결로 이익을 얻게 될 제조업이 손해를 보게 된 농업부문을 살린다는 명백한 정책적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 농업부문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노력한 흔적이 역역히 남아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민감 품목이 미국의 민감 품목에 밀려났다는 점이다. 민감도를 정할 때는 생산액의 순서대로 쌀·돼지고기·한육우·우유·닭·계란 등의 순으로 정하여 협상을 하였을 텐데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지만 돼지고기는 5번째와 9번째로 밀렸고 한육우는 5번째로 밀리는 등 축산물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생산액 감소를 추정한 결과 농업부문의 70%가 축산부



노 경 상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문 생산 감소로 나타났다. 협정 발표 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생산액이 농업부문에서 감소되고 그중 축산부문이 4,664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발표하였다.

● 농경연은 「KREI-ASM02006」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그 모델이 어떤 것인지 학계에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하였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론적인 바탕에서 분석된 것으로서 정책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 다른 학자들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모형 내에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는 미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축산물의 경우 소시지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전지분유·탈지분유·연유 등은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무관세TRQ 물량이 5,000톤이나 되기 때문에 즉시 관세철폐나 다른 없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낙농산업의 생산액 감소를 크게 과소평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관련산업의 생산액 감소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국회청문회에서 말했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영향으로 가축두수가 줄면 사료생산이 줄고 동물약품생산이 당연히 줄 것이며 관련자재산업 생산도 줄 것이다. 또한 도축두수가 줄어 도축장의 매출이 줄 것이고 육가공공장매출도 줄 것이다. 수송·포장·유통 등 축산업 관련 전반에 걸쳐 매출액이 줄 것이다. 이런 결과가 생산비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며 전후방 산업 전체가 1차 산업인 축산을 압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축산업은 더욱 생산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축산업의 생산액을 분석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가공품수입, 전후방 관련산업 전체의 생산액 감소분을 분석해야 설득력이 있는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이번 발표한 축산부문 생산액 감소 연평균 4,664억원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본다.

● 1차 산업의 생산액만 파악하더라도 축종의 규모에 따라 생산액감소가 다를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감소액을 추정하는 것도 역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생산액 감소와 소득감소는 다른 개념이다. 농가 피해액은 사실상 소득 감소를 따져야 한다. 생산액에서 생산비를 뺀 소득 개념으로 피해액



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감소는 생산액 감소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상승은 FTA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최근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인한 옥수수·대두 가격의 폭등은 축산업의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 또한 한·EU FTA 협상 개시, 한·중 FTA 준비 등 수많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양축가들의 사육의욕 감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기업마인드가 없으면 기업은 성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게 되는 것과 같이 양축가의 사육의욕이 떨어지면 축산업은 사양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감소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 FTA 협상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도 솟

소의 경우는 6월12일 가격이 3월12일 가격에 비해 1%하락 솟송아지는 5.5%하락하였다. 이로 인한 생산액감소는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가. 막상 국회가 동의하고 실제로 관세가 하락하여 수입상들이 과다경쟁을 벌리게 되면 혼선이 생겨 가격하락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 축산 관련학계에서는 이번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생산액 감소, 소득 감소,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학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축산업계는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축산업 관련 학계도 한·미 FTA를 충격으로 받아드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